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실태 개선

# 근본적 문제해결은 '법제도 개정'

최영규 도의원,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경비업법 등 4개 관련 법 개정 건의

갑질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최영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도내 최초로 전북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도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대부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분리 및 휴게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시설의 면적을 분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규정 제28조는 면적 기준 변경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로 휴게시설이라는 용어만 추가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이 제기한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은 더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시·도에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 '경비원은 괴롭힘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비원에게 갑질 등 괴롭힘을 가하는 상태는 대부분 입주인 또는 입주인대표회의(이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업체다. 괴롭힘의 당사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하직까지는 민간영역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상태. 노동인권존중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공공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갑질 문제 등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같은당사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제3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칙안 재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형태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더 많이 할 경우, 감시단속주 근로계약을 해서 안 되고, 근로계약법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 경비 외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직판단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경직판단기준 마련 시 경비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지금과 같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민연하는 제도상

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도록 해 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청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 신입교육비용 부담과 관련해 불법적인 사례가 없는지 전격적으로 조사하고, 고용관계상 약자라는 이유로 채용된 경비원 개인에게 신입교육비용 부담시키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합법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최영규 의원과 이병도 의원(전주 3)이 공동발의했으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2일 제262차 월례회를 정읍시에서 열고 인건을 논의했다.

## “서남권 관광자원 활용 광역교통망 연계 선행”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호남-서해안고속도로 연결 국도 개설 건의안 등 3개 안전 논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 시의회 강동화 의장)가 22일 제262차 월례회를 정읍시에서 열고 인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호남고속도로(내장산IC)와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IC)간 연결 국도 개설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류를 향한 범죄 행위의 예고이며,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결정 철구를 촉구했다.

이날 안건은 '호남고속도로(내장산IC)와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IC)간 연결 국도 개설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결의안',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등 3건이다. 우선 협의회는 "전북 서남권의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연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호남·서해안고속도로 간 연결 국도 개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인 정책제반영향조사 이등 거리 단축으로 획기적인 물류비용 감소 등 전북 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원전 오염수 주변 인접국들의 동의 없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류를 향한 범죄 행위의 예고이며,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결정 철구를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 “국가광역철도망 계획 전북 제외 ‘유감’”

민주 김수홍 의원, 국토부 발표에 “국가균형발전 부합 교통인프라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김수홍 의원은 "천안-익산 구간 KTX노선의 직선화를 비롯해 국가 식품클러스터 인입 산업선 구축사업 등 전북의 숨통을 틔울 핵심사업들이 전부 제외됐다"면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겠다는 계획에 해당하며, 180만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전북에서 반



영을 요청한 7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사실상 전남의 몫으로 분류돼 전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홍 의원이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천안-익산간 KTX노선 직선화 사업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익산시민이 열원한 바 있는 익산역의 '유리시아철도 거점역

지정' 요청도 묵살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형편인데, 군산조선소와 GM대우, 넥솔론 등이 문을 닫으며 협력업체까지 줄도산 및 실업자 유발로 지역경제가 무너진 처참한 상황"이라며 "젊은이들이 전북을 등지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떠나며 전북은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급한 상황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천안-익산-익산역 KTX노선 직선화 요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전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북은 경쟁력을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등 3분야 모두 '적합'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환경시행·검사 수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폐기물 3분야 모두 적합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시행·검사 수련도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부적합 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6개월 간 영업정지(1차), 등록 취소(2차) 등의 처분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먹는물 22항목, 수질 24항목, 폐기물 7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수련도를 수행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김이재 도의원, '국약진흥·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약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관련 상임위(문화건설 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국약진흥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이재 의원이 제정한 전북도 국약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국약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국약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약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국약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약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약 경연대회 지원, 국약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지사가 국약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약에 국약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